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지난주 태국 정치권에선 '유쾌한 반란'이 일어났다. 태국 총선에서 신생 정당인 전진당이 창당 3년 만에 제1당을 차지한 것이다. 전진당은 그동안 금기시됐던 왕실보독죄 형량 완화, 징벌제 폐지, 동성결혼 합법화 등 신보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슈를 주도했다. 결국 2030 유권자들의 열성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원 500석 가운데 151석을 획득했다. 수도 방콕 선거구 33곳 가운데 32곳을 휩쓸었다. '방콕의 봄'이 만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입헌군주제이며 사실상 군부가 통치 중인 태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기성 권력을 상징하는 왕실과 군부도, 기득권 체제에 편입된 제1야당도 모두 싫다는 민심이 결집된 것으로 읽힌다. 단순한 변화를 넘어 정치 구조 자체의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전 세계 언론에선 '정치적 지진'이라고 평했다.

신생 전진당이 꽃피운 '방콕의 봄'

전진당의 앞길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험난하다. 야권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한다 해도 군부와 기득권의 반발을 이겨내지는 미지수다. 태국은 1932년 이후 군부 쿠데타만 무려 19차례나 발생했다. 태국 경제의 체질 개선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왕실과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외교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정책을 기억해 보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등거리 외교 노선을 유지해왔다. 지금 정권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아주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군사 정권이었던 노태우 시절에는 북방 정책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하도고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차관을 빌려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경쟁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서두르는 바람에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악화되어 애꿎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정권 말기에 민감한 사안이라면

기고



오병태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
호남대 도시계획연구소장

벌써 15년 전이다. 광주광역시 도시마케팅분부는 도시 홍보 및 도시 마케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난 2008년 3월 발주했다. 이에 호응해 호남발전연구원은 광주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한 부분으로 영산강 워터프론트 마케팅 계획과 '아시아 북방 박람회'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결과적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그 시기에 전라남도 기획실은 정책 자문 교수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정원박람회를 전남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기획했다. 그리고 후보 대상지 중 서부권 신안보다는 동부권 순천에서 도시 및 시비 예산 2455억 원을 들여 2013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필자는 2013년 열린 '제1회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다. 박람회 개최 6개월만에 목표 입장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 박람회 기간 중 17만 명의 고용 효과와 지피초화류 26만 2425본의 농가 재배로 지역 화훼 농가에 활력소가 됐고,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순천시는 도시 마케팅에 성공해 환경 보존과 생태 도시, 정원 도시로

유쾌한 총선의 반란

군부, 기존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뜨리고 민주화의 진전을 이뤄낸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태국 총선 결과는 정쟁만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시사점이 크다. 지역 기반과 진영을 근간으로 기득권에 안주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민심이 점차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0.73% 포인트의 초접전 대선 결과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적대적 공생 관계에 기대어 편 가르기 정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혁신 경쟁'은 실종된 상황이다. 여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살피기에 급급한 모습이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제1야당은 변변한 혁신 공천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자체 동력으로 민심을 얻기보다 상대의 자책골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고, 민주당은 은근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거대 양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초선 의원들은 내부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적 결기보다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돌격대 역할을 하거나 눈치 보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물밑 협상의 끈을 이어가야 할 중진·원로들의 역할도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의 협치는 물론 당내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한국 정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정치적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난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도 네거티브 공세가 넘쳐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용납 안 된다

을 정권에 미루고 시간을 벌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미국의 욕심에 휘둘려서 사드를 배치하는 바람에 우리는 미국의 전초기지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고 말았다.

이것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마치 중국을 찌르려는 장으로 오해하기 충분한 사례를 제공하고 만 것이다.

연장선에서 최근 이 정부는 일본과의 일방적인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임금도 주지 않는 강제 노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화해하며, 마치 이 정권과는 상관없는 사건이고 역사인 것처럼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데 그처럼 역사를 지우려는 것은 침략자의 논리일 것임에도 이 정부는 마치 우리의 정부가 아닌 듯하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핵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태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한들 그러한 오염수 방류 자체는 문제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핵부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강대국들은 은근히 일본의 입장에서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서 안 된다. 이미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기피해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먹는 시늉을 해보여도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후쿠시마산 제품들은 매우 할값으로 겨우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광주 꽃과 정원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며

급부상했다.

10년 후 두 번째로 열린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개막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을 넘어섰다. 순천은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정원 도시 순천'으로 도시 마케팅에 다시 성공해 박람회 운영 기법을 배우려는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교육기관 등의 방문도 줄을 잇는다 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양평 등 전국 6개소 지자체들은 정원도시를 목표로 1차 지방정원(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조성에 도전해 달성했으며, 전국 40개 지자체들이 지방 정원을 설계하고 조성 중이다. 나아가 순천시와 울산시가 국가정원(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지정 목표를 이뤘고, 전남 강진군과 경남 진주시 등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순천만 정원은 지난 2015년 9월 5일 면적 92.6ha의 크기에 주재 정원 61개, 식물 848종 435만 그루를 심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도 지난 17~21일 '제3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대구광역시도 금호강에서 오는 10월 13~17일 '제1회 대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시도 광주 송정역 앞의 장록습지와 황룡강 수변공원 및 송산 근린공원을 연결해 '꽃과 정원박람회'를 열어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으면 한다.

광주광역시에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나라 최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남도의

사 결과, '지지는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30%대를 넘나들며 지지율로는 여야를 넘어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야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제3지대론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레 여야 지지층 결집 양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양당 경쟁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3지대론은 대선 주자급 구심점도 없는데다 그동안 실패한 전례들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계산이다.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민심이 갈 곳은 없다는 오만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적대적 공생 체제 이전 종식시켜야

하지만 민심은 그리 간단치 않다. 민심의 역동성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다. 산전, 수전, 공중전 등 역대의 난관을 극복해 온 민심이다. 군부 독재에 맞서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 1987년 민주화를 쟁취했고 촛불로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민심이 나서지 않고 적대적 공생 관계에 안주하는 정치권이 스스로 변하기는 쉽지 않다. 민심이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더 나아가 창조적 파괴를 촉발시켜야 한다. 이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방법은 참여다. 적극적 참여만이 판을 바꿀 수 있다. 지역과 진영, 세대와 젠더 등을 뛰어넘는 시민적 연대가 요구된다. 정쟁의 시대, 시민들의 역동적이고 유쾌한 반란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전진당 돌풍이 만들어 낸 태국의 봄은 결코 예측되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온다. 내년 4월 총선, 거대한 민심의 결집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봄을 견인하기를 기대해 본다.

에 대한 일본과의 국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단호히 거부했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과대 포장해서 우리 국민이 호들갑을 떠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이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핵 오염수가 바다를 떠돌기 시작하면 생태계가 문제될 것이고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를 방관해서 방사능 오염수의 실태를 점검하려 한다는 정부 시찰단의 면모를 보자.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을 위한 점검을 하려고 한다면 왜 이리 숨어 다니겠는가? 점검단이 아니라 견학생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해해 주면서 화해를 선불하면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과 함께 북한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인가? 북한의 도발을 일본과 함께 싸우겠다는 것인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 러시아의 침공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침공을 예방하지 못한 그의 행동 또한 충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입장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길 바라는 것이다.

社說

지자체에 재정 부담 강요 '군 공항 시행령' 수정을

국가 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사실상 국가 대신 지자체에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한때 광주시가 특별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3조 2항'이 지자체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은 종전 부지(현 군 공항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군 공항 특별법을 통해 관련 예산 부족분을 지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주시가

망 장사와 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에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입법 예고를 앞두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반영 노력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해 줄 것과 이전지 및 지역민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입법 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만약 광주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 부족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독소 조항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을 참고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없도록 수정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

"5·18 전야제 때 출판" 김 부시장 제정신인가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때 행사장 인근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 파 커지고 있다. 법안커드로 술을 마신 것이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 고위 공직자의 자세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추모 분위기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5·18 공법단체 등에 따르면 김 부시장은 제43주년 5·18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17일 오후 7시 30분께 행사장 인근 광주 동구 불로동의 한 식당에서 시청 공직자 등 1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동석자들은 "김광진, 김광진"을 연호하는 등 정치인 출석식을 방불케 했고, 김 부시장은 식사와 소주·맥주 약 30병 비용 등 44만여 원을 법안커드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그제 논평을 통해 "5·18 전야제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를 술값을 지불한 것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김 부시장은 즉각 광주시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전야제에 술판을 벌인 김광진 부시장은 5·18 희생자들을 욕보이지 말고 즉시 부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이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5월 17일에는 광주를 찾은 386세대 정치인들이 전야제가 끝난 직후 시내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셔 비난을 샀다. 이후 정치권은 5·18 행사에 참석할 때면 의원들에게 "금주령"을 내리며 경건한 추모를 유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야제 행사장을 지켜야 할 김 부시장이 술자리에 낀 것 자체가 문제다.

김 부시장이 5·18 추모 기간에도 18~26일까지 미국 모빌리티 선진 사례를 둘러보겠다고 출장을 떠난 것도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김 부시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5월 21일은 광주시민의 날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광주 중외 공원에서 첫 야외 행사로 성대하게 기념식이 치러졌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시민이 가족 단위로 참여해 시민의 날 행사를 만끽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의 날과 군민의 날을 지정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1년 365일, 많은 날을 두고도 굳이 5월 21일을 광주시민의 날로 지정한 배경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군을 광주 시내 외곽으로 철수시키고, 자유훈과 자치를 되찾은 날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날부터 시민들 스스로 나눔과 연대를 통해 '광주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계엄군의 대대적인 광주 진압이 있었던 5월 27일 전날까지 7일 동안 광주는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무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신군부는 광주가 '폭도들로 인해 치안 부재 상태'라고 조작했지만, 광주는 평화로운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길거리에 있던 잔해들을 치우

고, 흩어져 있던 시민군을 모아 재편성함으로써 치안을 유지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은 대가 없이 길거리에 가마솥을 걸고 밥을 지어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다.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진 부상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헌혈 행렬이 각 병원 앞에 줄을 잇는 등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대동 세상'(大同世上)'을 실현하면서 '광주 정신'을 만들어 낸 시간이었다. 그래서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다.

시민의 날

43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는 이제 인공지능

(AI),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치·행정·사회적 갈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80년 5월, 시민들 스스로 대동 세상을 실현해 '광주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서로 나누고 연대하면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합하고 단결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광주 시민의 날이 더욱 빛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국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